

논술강의(4.17,토)

핵심주제

1. 비상대비계획(총무계획)
2. 비상대비 심화 및 연구논총(핵심요약)
3. 국가동원 / 비축관리제도, 논술작성 및 정답해설

강의시간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교시 (09:30~10:30)	비상대비 심화논단 ·중국은 미국의 주적 (패권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과 비상대비 발전방향	유인물
2교시 (10:40~11:50)	비상대비 심화 및 연구논총 (핵심요약) ·미얀마 내전 위험성과 미·중 갈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물자동원소요 및 비축물자 관리 ☞ 연구논총(2018년 44권), 행안부홈피공지	
중 식 (12:00~13:20)	중 식	
3교시 (13:20~14:20)	비상대비계획(총무계획) · 총무계획 작성방법 소개 : 유인물	유인물
4교시 (14:30~15:20)	국가동원 및 실무 · 제7부 국가동원업무 총괄	논술교재
5교시 (15:30~16:20)	자원조사 및 비축관리 · 동원 자원조사 · 비축관리제도	
6교시 (16:30~17:20)	전주 모의고사 평가 및 풀이 금주 모의고사 평가 / 작성방법 지도	유인물

제 1 교시

(09:30~10:30)

- # 1. **중국**은 미국의 **주적**(패권경쟁 심화)
- # 2. 4차 산업혁명과 비상대비발전 방향

#1. **중국**은 미국의 **주적**(패권경쟁 심화)

I. 서론

미국의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체제로 교체되었으나 중국에 대한 태도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과거의 ‘중국위협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을 ‘미국의 敵’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더욱더 격변양상으로 변화되는 美·中의 경쟁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 본론

가. 최근 미·중 패권경쟁 양상

1. 美, ‘中 패권 도전 불용’ 與野 한목소리…불가역적 ‘對中봉쇄’ 추진
2. 美·中 ‘新통화 패권전쟁’ 서막 , 중,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 눈앞
 - ↳ 국제기구 新화폐 표준화 논의 / 미국 달러중심 체제 약화될 가능성
3. “중국은 미국敵으로 중국의 속임수 맞서 싸워야” 새 내각 출발부터 총공세
 - ↳ 블링컨 “위구르족 탄압은 대학살”, 엘런 “인권침해, 지적권 도둑질”

나. 미국의 대 중국 적대화 이유

1. 중국의 사회주의식 가치관과 모순 충돌

- 가) 중국이 발전하더라도 미국과 다른 가치관을 유지할 것
- 나) 미국은 인권을 강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가치관을 최선의 가치관 유지
- 다) 미국은 중국경제가 발전하고 국제무대의 일원이 된다면 당연히 미국의 가치관을 수용할 것이라 전망했음
- 라) 중국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욱 중화사상을 강조, 미국과 다른 사회주의 가치관을 강화하고 주변국가에도 지대한 영향, 미국과 가치관 충돌 초래

2. 미국주도 국제제도의 대체표준으로 중국이 등극

- 가) 일부 국가들에게 중국의 정치·경제제도가 미국의 제도를 대체한 제도의 새로운 국가표준으로 인식
- 나) 미국은 미국의 정치·경제제도(워싱턴 컨센서스)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이라 자랑하며 세계에 이를 전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때로는 무력을 사용하여 미국의 제도를 주입시키려 시도하였음
- 다) 중국은 미국과 다른 정치·경제제도(베이징 컨센서스)에서도 이상 없이 발전하는 예시를 보여주며 중국의 제도는 미국 제도를 대체할 유용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음

3. 중국의 비약적인 군사력 증강

- 가) 경제 발전에 이은 군사력 증강으로 미국에 위협으로 부상

- 나) 미국과의 냉전패배에 원한이 있는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기술을 전수받으며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히 발전하였음
- 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공표하였지만 동아시아의 국지적 우세를 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것임

4. 중국에 편승하는 약소국가들의 지속적 증가

- 가) 중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국가들 중국접근
- 나) 중국의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내수시장은 전세계 수출국들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며 특히 중국 내수시장은 향후 계속 증가추세임
- 다) 중국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이나 미국의 간섭에 불편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제재가 덜한 중국을 선택하고 있음

5. 중국의 시기상실에 대한 조바심

- 가) 중국의 굴기를 꺾을 기회상실에 대한 우려
- 나) 패권다툼에서 초미의 관심은 경쟁세력의 세력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이며 이는 이시기(피벗 시점)를 전후하여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가장 커지기 때문임
- 다) 중국의 미국 경제규모 추월시기를 2028년으로 전망, 중국이 비록 2028년 미국 경제규모를 추월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이 축적한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상대할 능력에 미치지 못함
- 라)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능력이 있다고 증명되는 순간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나 양측을 저울질하던 국가들이 중국 편에 가담할 가능성이 증가우려로 미국은 중국세력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침몰시켜야 함

다. 미국의 對중국 전략

1. 중국 편승국가 분리

가) 중국과 연대하거나 우호적인 국가들간에 갈등 조장→ 심화

- 1) 최근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강조하며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여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국가들이 중국을 원망하도록 유도
- 2) 일대일로에 참가한 국가들에게 중국의 부채함정 전략을 폭로하여 일대일로 정책은 이익공유가 아니라 경제식민지 정책임을 주지시킴

나) 美동맹국의 중국접근 봉쇄

- 1)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중국에 접근한 동맹국의 중국접근 차단

- 2) 중국과 미동맹국간에 갈등을 조장하여 중국과 미동맹국간의 관계 차단 추구
↳ 한국의 사드배치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코로나 발원지 조사 지지 등
- 3) 중국과의 경제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미국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주문. 전세계 안보문제를 내세워 중국 화웨이 제품의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기술발전을 저지하고 동맹국의 대중 관계차단을 가져오는 효과

다) 대 중국포위 전략

- 1) 중국의 일대일로 저지위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
- 2) 중국의 부상에 안보불안을 느끼는 인도의 인도태평양전략 참가는 미국의 성공으로 보이며 중국과 인도의 국경충돌은 미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순항
- 3) 중국 주변지역 분쟁과 내부분열 조장
↳ 중국은 내·외부 분쟁의 소지가 많은 국가이며 관리에 실패하면 국가가 분열될 위험이 큰 국가임
- 4) 인도가 미국의 후원으로 중국과의 국경충돌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남중국해에 관련국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중국에 큰 부담이 될 것
- 5) 홍콩, 대만, 신장위구르, 티베트 등 중국 내부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마그마가 항상 끓고 있는 상태이며 미국은 이러한 불안요소를 끊임없이 자극할 것

라) 미·중의 군비경쟁 유인

- 1) 미중은 장기적으로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군비경쟁을 유도
- 2)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주군을 창설하였으며 중국도 이에 대응한 군대를 창설
- 3) 미국의 우주군 창설은 소련을 명들게 한 SDI와 같은 역할을 할 공산이 커서 중국이 대응하기도 어렵고 대응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
- 4) 중국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에 본격 나선다면 중국을 힘들게 하고 중국에는 중국의 몰락을 앞당기는 짐이 될 수도 있음

III. 결 론

가. 미중의 주도권 투쟁양상은 더욱 격화될 것

- ☞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투쟁과 같은 워싱턴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의 투쟁이 격화될 것

나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블록화는 더욱 강화될 것

- ☞ 나의 세력은 공고화하고 상대 세력은 와해해야 함

다. 지정학적 요충지 국가들 안보위협 커질 것

- ☞ 지정학적 경계선에 위치하나 부족한 국방력으로 양측을 저울질 하는 국가들은 위험한 사태를 맞을 것(미얀마, 아프리카 다수 국가 등)

라. 중국 내부 또는 중국 영향력이 미치는 주변지역 불안정성 커질 것

#2. 4차 산업혁명과 비상대비 발전방향

I. 서론

냉전체제 종식,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수많은 위협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9,11테러 이후 포괄적 위기관리체제로 전환되어 국가위기관리 체계 구축위한 기술혁신과 첨단 산업개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 활용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안보정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II. 국가위기관리체계 변화

가. 위기관리 개념 : 위기(Crisis, 危機) 사전적의미 “위험한 시기”, “대단히 위험스러운 시기”를 말함

1. 전통적안보 : 위기가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위기개념 적용
2. 비전통안보 :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자연/사회적재난 적용

나. 국가위기 정의(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1. 주가의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체계 등 국가의 핵심 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 탈냉전이후 비전통적 위기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위기관리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새로운 위협의 증가, 사회적 취약성과 불확실성의 증가로 위기관리영역 확대

다. 위기관리의 변화추세

1. 1970년 이전: 세계의 위기관리는 냉전체제의 영향으로 군사안보 중심
2. 1970년 이후: 군사안보→재난대비로 중심이동시작(산업화/도시화발달)
3. 1980년 : 냉전체제 와해, 불확실적 영역의 증가로 선진국 재난대비로 변화
4. 9,11테러이후 : 새로운 위협에 대비, 평시 재난대비위기관리 재검토시작
→ 테러/재난 등 비전통적 영역까지 위기관리확대, 포괄적위기관리 개념적용
5. 2000년이후: 국가안보영역은 군사위주에서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자원,기술과 재난 등 비군사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위기관리영역의 확대
☞ 최근 사이버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밀거래, 환경파괴, 에너지, 식량,기후 변화, 감염병, 사회적 갈등, 정치적 박해, 질병, 기아, 범죄 등 포괄
※ 인간안보(human security) 영역이 중요한 안보요소로 증가

라. 국가위기관리 체계

1. 선진국 : 군사안보 탈피, 정보주도권 기반 국가권위유지와 경제적이익 증가
군사적 자주국방달성, 전쟁위기 상황시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수행
 2. 중진/후진국 : 외부위협에 대처하는 군사안보가 우선, 국가생존/국민안녕
직결되고 국가역량의 결집되는 국가안보 개념이 우선적 요구
- ※ 군사안보 이후 재난관리가 요구되는 포괄적 국가위기관리체계
- ※ 최근 한국도 국민편익과 경제적, 복지적 관점에서 국가 안보관의 변화

Ⅲ. 국가위기관리체계 변화

가. 국가비상대비 현실태와 개선방향

1. 비상대비조직 : 한국의 위기관리체계는 군사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안보관리
전시와 이에준하는 상황에 대한 비상대비, 대테러, 자연재난, 사회적재난 관리
전시와 평시위기에 관한 민방위로 구분하여 대별
2. 국가비상대비 조직 변천

년도	구 분	변 천 사 유
1969	비상기획위원회설치	68년 1.21사태
1984	비상기획위원회 국무 총리소속으로 변경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로 대체입법으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정
1986	NSC행정실 폐지 비상기획위원회 확대 (장관급)	행정실의 NSC 회의지원기능을 비상기획위원회 로 이관하여 실시
1998	NSC 사무처 신설 비상기획위원회 축소 (차관급)	국민의정부 출범이후NSC사무처 설치, 비기위의 NSC회의지원 기능을 이관하면서 조직 축소
2008	NSC 사무처 및 비상기획위원회 폐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전시비상대비기능과 평시 재난관리기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통합(국장) 안전관리본부 내 비상대비기획국(국장급)
2013	안전행정부 출범	-안전관리본부:재난+비상대비
2014	국민안전처 출범	안전정책실 내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설치(국장) -민방위기능(2개과) 추가편성
2017	행정안전부 출범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비상대비정책국으로 독립 (2017,2,28)기획+동원자원관리+교육훈련+민방위 재난안전+비상대비 업무 수행

3. 국가비상대비 관련 법규

가) 국가안보 목표와 국가위기관리 법률을 연계성 있게 규제할 총괄적 차원 국가 위기관리 법령이 없음(비상대비자원관리법, 민방위기본법)

※ 위2가지 법률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제정배경, 목적 상이하여 충돌

나) 비상대비 주요법규

구 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민방위기본법
제 정	1984년	1975년
주 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목 적	비상시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의 효율적 관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위기발생 요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재난발생
위기유형 분류	전쟁,사변,병력동원이 필요한 사회질서 교란상태	적침공, 자연,인위적,농업,화학. 생물학,방사능, 공업,산림,재난 등

※ 전시대기법 :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 국지전 등 위기극복위한 부분동원법률안

나. 국가비상대비 발전(개선)방향

1. 법률적 발전방향

가) 전시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률 타당성 문제

나) 전시대기법과 법령을 입법과정을 거쳐 평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

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통합방위법의 효력과 범위,대상을 세부적 검토하여 중복/ 불필요 행정노력 낭비 부분을 보완필요

라) 비상대비법규는 정보통신기술(ICT)발달과 연계하여 보완하고 발전

마) 현재 물자동원에 관한 법률부재, 물자동원준비/자원관리 하는 법령만 존재

2. 동원물자 관리 및 수송(발전방향)

가) 동원지정, 자원할당/배분에서 동원정보화 체계가 미흡하여 소요제기 단계부터 전산화 필요 → 전산화DB구축 및 통합운용

나) 부처별 운용되는 동원 전산시스템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 시스템 연계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상하 시스템 연동

다) 자원관리와 운용 및 현황 확인이 실시간 용이 하도록 연동형 전산 인프라 구축필요 → 실시간 데이터 제공 및 연동체계 운용

3. 비상대비 교육훈련(발전방향)

가) 정부위기관리 훈련

구 분	근 거	주요 내용	규 모	시 기
을지연습 (행안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충무계획 적용(도상연습) 軍 연습과 병행	중앙부처 지자체 (시·군·구 이 상)	8월 (3박4일)
충무훈련 (행안부)		충무계획과 자원동원훈련 -복합피해복구훈련 등 군화랑 훈련과 병행	매년 5~6개 시 도 3년주기	4,10월 (3박4일)
재난대응 안전한국 (행안부)	재난/안전 관리기본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도 상) 실제훈련(시도) -자연재난/인적재난	중앙부처 지자체 (시··군 구 이 상)	4~5월 (2박3일)
테러대비 (국정원)	국가테러활동 지침	테러유형별 훈련(실제/도 상) -국정원,대테러 운용반	군,경찰 등 관련유관기관	수시 1일

나) 발전방향

- 1) 객관적인 평가와 교육훈련 환류시스템 적용
- 2) 미래과학 기술적 시스템 적용, 과학적 평가와 분석모델 적용
- 3)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와 미래전장 환경 변화요소 적용
- 4) 사이버영역과 네트워크 연결 등 미래무기체계 변화에 대응수단과 지원능력
- 5)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대응방안 결정하는 첨단의사결정, 상황관리체계 적용

다. 국가비상대비 체계의 첨단 ICT적용 패러다임 변화

1. 상시운용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국가비상대비 플랫폼 구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국가위기관리센터-중앙재난안전상황실-지자체-현장)
2. 인공지능(AI)에 의한 의사결정지원 체계 구축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설치로 다양한 상황변화에 적시적 대응조치
3. 사물인터넷(IOT)에 의한 동원자원과 주요시설 관리 강화
→ 사물인터넷 적용한 위치기반시스템(하수도범람,무선전자태그,대테러감시시스템 등)
4. 드론을 활용한 동원물자 및 장비 수송체계 구축
→ 전공간 및 시공간을 초월한 드론활용으로 적시적 수송체계 구축
(아마존 프라임, CJ스카이도어, DHL의 파슬콧터, 알비바바 쿼드라콧터 등)

5. 가상 및 증강현실 기반의 비상대비 훈련

-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적용한 실전적 훈련과 체험
(문화재청 복구훈련, 대피소 찾기, 국민행동요령 등 가상체험 적용 등)

IV. 결 론

- 가. 첨단화된 현대사회에서도 평시부터 비상대비 체계구축 필요성 증가
 - 나.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조치와 방안 적용시 첨단 ICT기법 활용체계 구축
 - 다. 동원자원과 국가주요시설 관리에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접목 발전
 - 라. 수송 및 물자 운송시 드론봇 활용하는 첨단시스템 구축
 - 마. 가상 및 증강현실 기반의 훈련체계구축과 유사환경조성 숙달
- ※ 4차 산업혁명시대 포괄위협 대비 비상대비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적용

(출처 : 비상대비연구논총 2018년 44호)

제 2 교시

(10:40~11:50)

★ **비상대비 심화논단 및 연구논총(핵심)**

1. **미얀마 내전 위험성과 미·중 갈등심화**

2.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물자동원소요·비축물자 관리**

#1. 미얀마 내전 위협성과 미·중 갈등 심화

I. 서론

초기 성공적으로 보이던 미얀마 군부쿠데타가 날이 갈수록 시민의 저항이 거세지며 내전의 위협까지 보이고 있다. 만약 미얀마 쿠데타 혼란이 장기화되고 최악의 경우 내전이 발발한다면 그 파장이 미얀마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미치게 될 것이다. 미얀마의 내전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미중갈등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본론

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위협성

1. 미국 “미얀마 군부 금융재제와 제3국 기업금융사까지 제재 가동”
 - * 中은 “간섭 않겠다.” 했지만 수지·군부사이 이익 저울질
2. 미얀마 최악 유혈진압으로 사망자 폭증과 시민들 무장봉기 촉발
 - * 美국무부 “끔찍한 폭력 목격” 국제사회, 군정 비판 한목소리
3. 미얀마 민주화 시위대, 중국공장에 방화, 反中으로 번진 분노
 - * 중국, 80년대부터 미얀마 군부 지원, 도로·철도 사업하며 영향력 키워
 - * 시민들 “중국이 미얀마 쿠데타 배후” 주장, 공장 창고 불지르고 기물파손 등

나. 미얀마 민주화 시민저항 성공가능성 요소

1.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 *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확산, 피해를 감수할 의지가 높음
 - ↳ SNS와 민간상용 통신망 등 시민세력의 민간 통신수단을 보유
2. 외부의 지원(인적/물적) 활동 증가
 - * 최근 국제사회와 NGO, UN 등에서 미얀마 시민들에게 지원공표
3. 쿠데타 군부세력의 분열
 - * 쿠데타 세력 중에 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과 쿠데타를 배신할 경우 얻게 될 이익을 위해 쿠데타에서 이탈 할 수도 있음

다. 미얀마 내전발생 가능 요소

1. 대립되는 양대 세력존재로 내전의 가능성 상존
 - * 대립하는 세력이 둘이상이 될 경우는 이합집산에 따라 내전의 형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장기전이 될 수 있음
2. 대립세력들 내전에 필요한 무력보유

- * 적대시하는 집단이 내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무력이 있어야 함
- 3. 공존할 수 없는 갈등 존재 : 내부에 종교적, 역사적, 민족적, 이념적 성향존재
 - * 공존할 수 없는 둘 이상의 집단이 공존하는 경우는 약한 집단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들에게 외부의 지원이 있다면 하시라도 봉기할 수 있음
- 4. 내전을 촉발할 위기 발생요소 증가
 - * 미얀마 국민적 감정을 자극하는 군부의 잔악한 진압 사건의 발생은 피압박 세력의 저항의지를 자극하여 정신력의 변화를 초래하게 됨
- 5. 주변국들의 사주와 지원
 - * 내전에 개입할 미국과 중국의 역할론 증대로 내전가능성 농후
 - * 전략적 요충지나 천연자원의 보고인 지역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내부분쟁이 발생한다면 주변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음.

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중간 평가

1. 쿠데타 조기 성공 실패

- ☞ 2월 1일 전격 실시한 쿠데타가 1개월 반이 지난 시점에 안정화에 실패한 점으로 보아 조기 종결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

2. 주변국과 미국·중국 등 간섭 기회 제공

- * 상황의 조기종결에 실패함에 따라 주변국과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미얀마 사태에 개입하게 됨
 - ※ 군부가 조기에 쿠데타에 성공했다면 주변국은 비록 비난은 할 지언정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행동을 했어야 하나 혼란한 상황에서는 자국에 유리한 결과물 도출하기 위해 미얀마 사태에 개입하게 되었음

3. 시민저항 운동의 조직화·세력화 양상

- * 시민저항 운동이 최초 양동이나 두드리는 평화적인 시위에서 대규모로 죽음도 불사하는 저항으로 조직화되었음
 - ※ 자체 시민세력의 능력과 외부의 지원세력에 의해 조직화·세력화 양상 발전

4. 미·중의 경쟁의 戰場 전략할 위험성

- * 중국과 국경을 접하며 중국의 일대일로에 중요한 나라인 미얀마는 중국도 미국도 그냥 구경만 할 수 없는 국가임
 - ※ 쿠데타 성공은 중국에 유리하며 쿠데타 실패는 미국에 유리한 상황임. 최소한 혼란의 장기화나 내전은 미국에 유리한 상황임

Ⅲ. 결 론

가. 미얀마 정국불안정 장기화 가능성 / 최악의 경우 내전의 위협성농후

- 이미 미얀마 정국 조기안정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음

나.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미얀마 정국에 깊이 관여할 것

- 미·중 양국은 미얀마가 상대방의 자산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음

※ 중국은 국경주변을 안정화 시키고 일대일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며 미국은 중국의 의도를 분쇄해야 함. 미국은 이를 위해 미얀마가 미국편이 안 된다면 차라리 혼란이 지속되거나 내전을 하는 편이 유리할 것

다. 미얀마 사태가 한국전쟁의 미얀마 판이 될 가능성도 있음

※ 미국과 중국이 직접군사를 파병하기 보다는 후원세력을 지원하는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크며 최악의 경우 직접 파병할 가능성도 있음

라. 시민저항세력과 군부간의 전면적인 무력충돌 가능성 높음

※ 본격적인 시민저항세력과 군부의 충돌은 시민저항세력의 무장의 수준과 최종상태에 대한 의도를 표출하게 될 것임. 이는 쿠데타 사후처리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나타낼 것임

★ 소결론

미·중 패권 경쟁하는 와중에 미얀마 군사 쿠데타는 미·중의 직접 충돌을 초래하게 되었음, 미국과 중국에게는 미얀마 사태가 패권경쟁이나 자국의 전략적 이익확충이나 경제패권 영역의 한 부분이지만,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임. 강대국의 경쟁속에서 자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보장은 국가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임.

#2.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물자동원소요 및 비축물자 관리

I. 서론

세계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주요 강대국들은 국제분쟁에 개입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안보와 사회 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에 반해 초고령화, 인구절벽 시대로의 도래, 4차 산업혁명기술 혁신에 따른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한 미동맹의 강화와 자주 국방력 강화, 북핵문제 해결을 언급하면서 **튼튼한 안보가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산업과 기술의 발전,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등 국내 외 안보환경 변화와 첨단무기를 사용하는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과 미래 전쟁양상 등 안보여건 변화에 따라 물자 동원소요 및 비축물자 관리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국내의 안보환경 변화

가. 새로운 안보개념의 등장

냉전이 종식되면서 가공할 재래식 무기로 상징되는 전통적 안보의 위협과는 상이한 새로운 위협이 인류에게 다가왔다.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안보분야의 새로운 연구 주제로 등장함과 동시에 미래의 안보 개념을 전환시켰다.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행위주체가 초국가적인 방향으로 변화함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위협의 실체도 환경, 사이버, 마약, 테러, 인간,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개인과 소규모 집단문제에서 비롯되는 안전의 문제**에서 촉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환경안보**는 인간의 지식수준이 고도화되고 과학화됨으로써 생긴 위협으로서 대기 수질오염과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 지구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안보** 분야가 있다.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지역 및 민족 분쟁으로 인해 수많은 난민들이 생기고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대량으로 발생한 **난민**은 인접 국가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치유해야 할 안보문제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간안보 분야의 일부분일 뿐이며 그 외에도 많은 인간안보 분야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나.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정세

1. 중국의 팽창정책

21세기에 중국은 과거 후진적인 경제상황에서 탈피하여 국내 총생산에서 일본을 초월하여 미국에 이어 2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G2에 명명될 정도로 국제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지역, 나아가 세계안보 지도를 다시금 고쳐 쓰게 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군사력 강화를 위한 행동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일대일로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굴기를 이룩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주장은 미국의 세계적인 지도국 위상을 인정하고 그 권위와 리더십을 존중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중국의 위상과 역할도 인정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미국의 대중국 억지

탈냉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은 그 강도는 다르지만 여전히 냉전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진다. 여기에는 한반도 문제 및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 이에 대항하는 일본 및 미국, 동남아 국가들과의 복잡성**이 그것이다. 중국이 지역 및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뛰어 오르면서 미국은 일찍이 중국의 부상위협에 주목하기 시작 하였다. 미 일과의 관계강화는 **결으로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비롯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지만 사실 중국의 부상에 대비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행동은 **중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보호함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에 일본을 합류시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또 다른 대중 견제의 수단은 대만이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원칙적으로는 지지하지만, ‘**대남관계법**’을 제정하여 ‘**두 개의 중국**’을 상징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부시정부 이래로 대만에 대한 신형무기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대만과의 비군사적 관계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미국은 대만해협을 기점으로 해군력 및 공군전력의 후원을 통해 중국과의 대리적 성격의 경쟁과 견제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3. 한반도 정세변화

북한은 그동안 개발해오던 핵무기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핵보유국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관심을 보이면서 상황이 급속하게 변화였다. 한국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북한대표단을 맞이 하였으며, 이후 남북

관계는 급속하게 전개되었고,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하였다. 이러한 남북관계 변화는 몇 가지의 이유들이 북한을 추동한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는 북한내부가 김정은의 체제로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자부심 때문일 것이다. **세 번째**는 그동안의 국제제재와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과 UN에 의해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외국과 경제적 교류가 제한되었다. 따라서 김정은은 국제적 압박을 완충시키기 위해 외교적 수단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은 한국정부의 협력적인 중재 하에서 계속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라는 카드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고 있다.** 북한으로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대북제재의 해제이다. 이는 북한 국내경제의 활성화와 외교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북한의 일차적 협상의 목표라 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문제가 북미 관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핵화를 조건으로 상당한 가치를 요구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잘 아는 미국과 주요 국가들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에 한반도의 교착상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포함하여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 전쟁양상의 변화 및 산업의 발달

1. 장차전 양상 변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전쟁양상들이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더구나 근대 이후 과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전쟁양상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전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판단할 수 있다. **첫째**, 비국가적·초국가적 위협세력의 등장인데, 여기에는 범세계적 테러집단이나 마약, 종교와 같은 요소들이 그것이다. **둘째**, 공격목표가 과거처럼 군사력이나 지도(지휘)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국의 의식을 지배하는 문화가 될 것이다. **셋째**, 미디어 및 의사전달 수단을 이용하는 고도의 심리전이 전개될 것이다.

2. 미래전의 하이브리드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이 미래의 전쟁양상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첫 번째는 전쟁의 비선형성이다.** 과거 정규전 형태의 전쟁은 선형전투의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으로 최근 정쟁의 양상은 헤즈볼라 및 IS 등과의 전쟁도 비선형전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과거 전쟁으로부터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동시적 양상은 무수하게 많이 있어왔다. 그러나 미래의 하이브리드전쟁은 정규전 및 비정규전, 테러 및 소요, 범죄행위 등이 동일한 전장에서 동시에 수행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특정국가의 특정지역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장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는 수렴(convergence)의 의미이다. 이는 전쟁의 수행개념이 모든 가용수단을 총 동원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치명적인 수단 뿐 아니라 그 효과가 미미한 수단까지 융합하여 수행하는 데, 정규전 및 비정규전, 테러, 범죄행위 등이 동시에 한 전장에서 수행되며 물리적, 비물리적 요소가 적국의 전투원 및 비전투원에게 다각적인 폭력을 가하리는데 있는 것이다.

Ⅲ. 물자동원 소요 및 비축물자 관리 실태

가. 현 물자동원 정책

현재 한국의 물자동원은 ‘소요기반 동원정책’이다. 정확한 소요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동원할 품목과 물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때 소요 산출의 기준은 적(敵)이다. 즉, 적국의 공격에 대한 가정과 시나리오를 미리 판단하여 자국의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요기반 동원정책은 정부의 동원능력을 초과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의 전쟁수행능력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더 큰 국가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렇듯 미래의 동원소요가 유동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소요기반 동원정책에 집착하여 작성된 시나리오는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1. 국방전시정책서 : 전쟁 지원을 위해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국가동원을 통한 군사작전 지원이다.

둘째, 전시 군수지원능력의 확보이다.

셋째, 전시 긴급소요전력 판단과 적기 획득이다

2.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동원 대상인 물적 자원 즉, 무기 탄약 폭약과 그 밖의 군용물자를 중점관리 자원으로 지정하고, 다시 이를 생산 및 관리하는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방위산업체도 예외가 없으며 현재의 충무계획상에서도 방위산업체도 임무고지를 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관리의 주체 즉, 누가 지정권한을 가지고 임무고지를 하는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는 동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에 관하여는 법 제15조45) 및 제16조46)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훈련 대상은 주무부처 장관이 지정한 중점관리지정업체를 말하며 산업동원인 경우 주무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된다.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대상물자와 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동규칙 제3조48)에 기술하였다.

그러나 방위산업체와 원자재 생산업체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관여하는 물자 및 업무는 제외되었다. 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관할 기관에게 위임하는 부처도 있다. 위 사례를 참조하여 방위산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은 방위사업청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위사업청을 비상대비 관련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가와 물자동원에 대한 집행 권한이 없는 국방부가 통제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동원소요 산정 및 소요제기 절차 미준수

동원소요제기 절차가 행정적 관행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X-1년 2월까지 행정안전부로 통보하는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반기 자원조사에서 소요가 누락되거나 정확한 동원능력 및 수급판단이 곤란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침에서도 검토했던 부분이 있다. 먼저 일방적으로 동원의 능력의 한계를 설정하여 소요 제기된 부분을 삭제한다면 동원의 기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군에서는 꼭 필요한데 현재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시에 공급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국가 총력전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비축물자 관리

1. 비축의 개념

비축이란 전쟁초기 대량획득이 곤란한 전투긴요 품목을 재보급하기 위하여 평시부터 확보, 저장해 두는 것을 말한다. 전시 편제 및 인가 소요에 추가하여 평시부터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 물자 장비 탄약 수리부속 등이 포함된다.

비축소요란 선정된 비축대상품목에 대하여 전쟁개시일로부터 60일간의 전시소요에서 현 능력(보유량)을 제외한 부족량을 의미한다.

비축목표는 합참에서 선정한 비축소요에서 전시 확보 가용량(산업 동원, 국내 외 조달 등)을 차감한 부족량을 의미 한다.

2. 비축물자 관리 실태 분석

정부의 비축 현황은 총 312종 규모로 27개 기관(행정 9개, 공기업 18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중 **공기업 등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자가 전체물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종별 비축현황을 분석해 보면 **2종은 통신용 전지가** 소요에 비해 다소 부족 하고 케이블 야전선의 초과 비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필요하다. **4종은 장애물자재는 충분한데 비해 활주로자재 일부가** 부족하다. **3종은 산업동원과 방위 예비유류 양이 충분하다.** 휘발유, 등유 등의 유류는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 관리하고 있다.

7종은 비축계획의 실효성이 다른 종에 비해 낮게 분석되었다. 특이할 만한 점이라면 방위사업청은 현 방위사업법을 근거로 방산업자재 비축제도의 목적을 평시 자재의 업체 대부분을 통한 **순환활용으로 방산업체의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 ☞ 7종 완성장비 : 대상장비는 합참이 선정한 장비로서 장비별 개별 소요를 산출함.
 - 개별소요의 총량을 합하여 비축소요량으로 산출함.

Ⅲ. 물자동원 소요 및 비축물자 관리 발전 방안

가. 물자 동원소요 실효성 제고

1. 미래 능력기반 동원정책으로 전환

현재의 **소요기반 동원기획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동원 능력을 고려한 능력기반 동원기획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현 능력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군의소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동원능력을 확대하는 방향** 즉, 정부부처와 협조하여 미래에 확장된 **동원능력(동원목표)를 설정하는 동원기획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가) 국방전시정책서 지침

국방부 군수관리실은 방위사업청에게 방위산업체에 한하여 전시 조달 및 동원임무를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에 명시해야 하며, 전시조달 및 동원에 대해 전시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지침도 반영한다.

이를 위해 국가전쟁지도지침에 전시군수지원은 동원, 조달, 해외 자원의 협조 등 획득방법을 적용하되 방산품목은 전 평시 일원화된 획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

나)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방산물자는 주무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장관이 주무장관이 되면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작성과 이에 대한 집행계획의 작성 책임이 부과되며 총무계획상 문서 체계에서 방산물자 집행계획을 추가하면, 방위사업청은 총무시행계획 작성 부서가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전시 군수지원의 전문 기관으로서 방산품목 및 방위산업체의 통제에 관한 전 평시 일원화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다) 국방부 동원업무훈령

“국방동원에 관한 훈령”상에서 방사청의 동원업무를 5종, 7종, 9종 방산물자의 동원업체 지정 및 관리임무를 부여하고, 동원 및 조달 능력 제한 시 비축 및 해외자원의 협조 대책을 적극 강구 하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나. 비축물자 제도개선 및 관리 발전 방안

1. 비축 관련 용어 및 개념 재정립

전시를 대비하는 기능은 비축, 동원, 전시조달이 3개의 축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전시소요 산정기준일(현재 60일)이 줄어든다면 비축소요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 훈령(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용어에 대한 재정립을 추진하고 비축소요, 비축목표 등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할 필요가 요망됨.

2. 관련 법령(훈령) 개정

비축관련 법령인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 훈령’의 업무분장 및 용어 재정립 필요하다. 비축 대상품목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중기계획과 연계하는 비축 업무체계 정립

현행 10월 말 비축계획서 확정 후 후속조치가 제한되고 중기계획과도 연계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비축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

4. 중장기 비축계획 발전방향

비축수준은 작전계획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작계의 변화 없이 비축수준만 변화 시키는 것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작전환경의 변화,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비축개념 중장기 발전방향을 검토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

IV. 결 론

물자동원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분야이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 입장에서는 특히 소요 부문과 전 평시 연계체계가 관건이 되는데, 이제는 소요 단계에서부터 자원의 생산 환경을 고려하여 제기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른 동원과 조달의 적절한 배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 번째로 소요기반의 동원정책에서 능력기반의 동원정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향후 국방 및 동원환경과 연계하여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두 번째는 전 평시 장비 물자의 일원화된 동원업무체계를 정립하는 문제이다.

세 번째로 소요기준 정립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 보았다.

군사작전지원을 위해서도 국민들에게 미래 전장 환경과 무기체계의 변화에 부합되는 대응수단과 지원능력을 갖추도록 교육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비상대비 위기관리 대응체계에 참여하는 주요 인력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시공간과 예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여건에서 다양한 상황 하에서 위기관리능력이 숙달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반복해야 하며, 혁신적인 교육훈련모델 개발과 이의 숙달을 통한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5 교시

(13:20~16:20)

3교시 : 비상대비계획(총무계획)

☞ 총무계획작성 방법 소개 : 유인물

4교시 : 국가동원 및 실무 : 논술교재

☞ 국가동원체계(동원업무) 총괄

5교시 : 자원조사 및 비축관리 : 논술교재

☞ 자원조사 / 비축관리제도

#1. 비상대비(총무계획) 작성방법 / 소개

1. 총무(비상대비)계획

가. 비상대비계획(총무계획) 정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비군사분야의 종합적인 전시 대비계획, 총무계획으로 칭함

나. 근거법령 : 비상대비자원관리법령 등 전·평시 법령 약 230개

- 1) 평시법령 : 병역법, 예비군설치법 등
- 2) 전시법령 :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 등 23개
- 3) 국제협약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등

다. 주관부서 : 행정안전부

2. 총무계획 작성체계

계 획	작성 주체	일 정	비 고
기본계획 지침	행정안전부	X - 1, 1월(5년 단위)	대통령 승인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X - 1, 5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집행계획	정부 부·처	X - 1, 7월	국무총리 승인
시·도 시행계획	시·도	X - 1, 10월 15일	주무부장관 승인
시·군·구 실시계획	시·군·구	X - 1, 11월	시·도지사 승인
임무고지 : X - 1, 12월			

※ 중점관리지정업체 실시계획 : 주무부장관 승인, 비자법 세부조항 참고

3. 총무계획의 구조 : 26개 부처(5위원회, 4처, 17부)에서 작성, 총 7,808 건

분 야	작성기관 수	건수	비 고
기본계획 지침, 기본계획	1	2	행정안전부
집행계획	25	42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17개 부
시행계획	17	598	특별·광역시, 도
실시계획		5,132	시·군·구, 중점관리지정업체(6,600여개)
자체계획		2,034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중점관리지정업체

※ 매년 소관부처별 총무계획 작성/하달

4. 총무계획 작성 원칙 (비상대비계획 작성실무편람, 행정안전부)

가. 상위계획보다 구체화

- 부 처 : 기본지침/기본계획의 반영사항을 확인·검토 후 관련 사항을 소관계획에 반영 및 구체화
- 시·도 : 기본계획/해당분야 집행계획 반영사항을 확인·검토 후 관련사항을 소관계획에 반영 및 구체화
- 시·군·구 : 소관분야 시행계획의 반영사항을 확인·검토 후 관련 사항을 소관계획에 반영 및 구체화

나. 상·하계획 및 횡적 유관분야 계획간 연계성 확보

- 계획 작성체제를 이해하고 업무상 관련되는 상·하 및 횡적 계획 내용을 사전 확인하고 연계가 되도록 작성
 - 보건복지계획과 국토건설계획(대학교내 병원시설 지정관련 건물동원 필요) 등

다. 소관분야 및 해당지역의 환경변화 여건(실정, 특수성 등) 고려·반영

- 각 분야별 시책추진 중점사항을 소관계획과 관련 검토·반영(창조경제, IT기술 활용, 천연가스 사용 버스 증가 추세 등)
- 시·도별 특수한 현실 여건이 계획과 연관될 경우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되, 소관분야 상위계획의 개선 필요사항도 발굴

라. 비상대비와 관련된 제도·법령 변경사항 검토·반영

마. 비상대비업무 추진상의 제기된 문제점 개선사항 검토·반영

- 계획을 검증하는 각종 훈련(을지연습, 총무훈련 등), 비상대비 시행태세확인·지도방문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사항 등

바. 「피해율산정기준표」(11. 11)를 참고, 가능한 범위내 적용

- 지역별·시설별 피해율 표적 분류(인원/시설/장비/물자 등)에 따른 피해율을 감안하여 계획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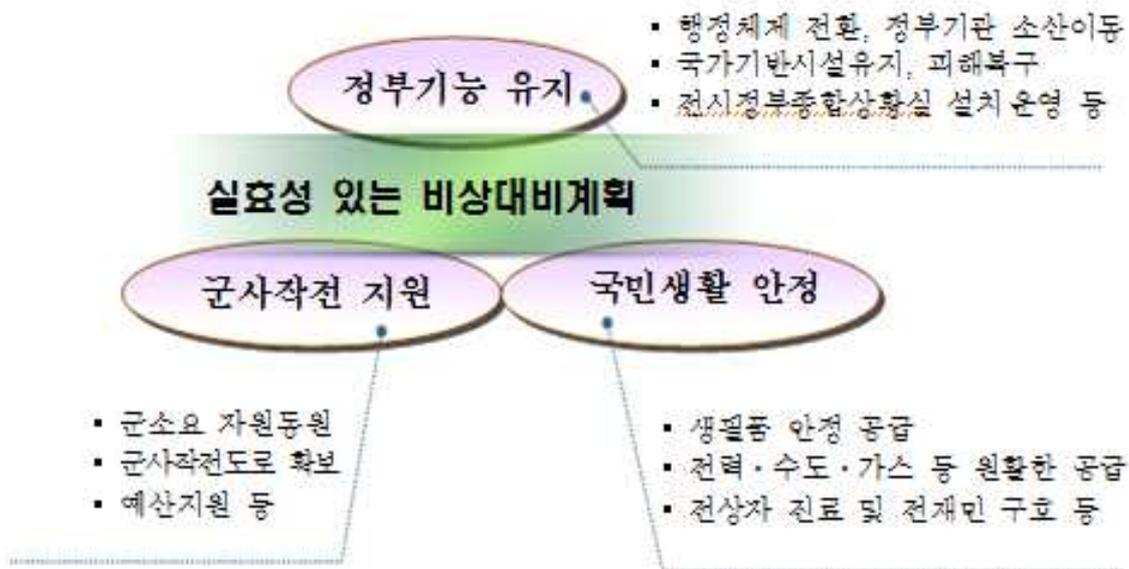
5. 개념 및 목표

(비상대비계획 작성실무편람, 행정안전부)

1. 개념

-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정부 각급기관이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정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전시대비계획(총무계획으로 별칭 함)을 말함

2. 계획의 3대 목표



3. 작성 근거법령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민방위기본법, 예비군법, 병역법 등 분야별 관련 개별 법령
- 한·미 상호방위조약, 전시지원 일반협정 등 국제협약
- 전시대기법령안(31건)
 -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대통령 긴급명령안) 등 16건
 - 전시 전재민 구호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안(대통령 긴급명령안) 등 15건

※ **총무계획작성시 착안사항** (비상대비계획 작성실무편람, 행정안전부)

부처별 (분야별)	총무계획 핵심내용	작성상의 고려 및 유의·착안사항
방송통신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방송기능유지 • 방송기반시설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핵심기술 및 연구인력 보호대책 • 방송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긴급복구계획
인사혁신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비상근무 • 전시공무원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비상근무, 전시 윤리·복무 • 채용시험·교육훈련, 연금관리
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 분야별 제반대책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수행을 위한 제반대책 강구 • 전시 국민보건을 위한 확보대책 강구 • 전시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제반대책 강구
원자력안전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능방재 및 핵 안보 • 연구용 원자로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능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에 대한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시·도 시행 및 실시계획 수립(핵전대비)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에산편성·운영 • 국민생활안정(배급제), 금융통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에산은 M+30, M+364로 구분·편성 • 배급품목 및 시기, 절차 구체화 • 금융자금지원대책 구체화 등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학교 운영 • 전시 학생지원단 운영 • 연합대학 설치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의 내용별 계획 구체화 • 학생지원단 운영 구체화 • 학교이동 및 재배치, 연합대학 구성계획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과학기술 및 연구 개발 지원계획 •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 사이버테러 대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과학기술인력 보호 및 관리계획 및 과학기술지원계획 • 국가지도통신망 관리유지 / GPS교란대응 • 사이버테러 대응 관련 복구절차 등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외교활동, • 주한 외국공관보호 • 비전투원 출국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단계별 외교활동의 구체화 • 주한 외국공관 보호관련 경찰과 협조 • 비전투원 출국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조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민 관리, 수용소 운영 • 북한체류국민 철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민 수용관련 시도계획 구체화 • 북한 체류국민 보호관련 사항 구체화 등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소산 및 이동 • 주민 및 차량통제 • 치안계획 • 인력동원, 민방위, 화생방 • 전재민수용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 소산 및 이동 계획 구체화 • 수도권 주민·차량통제계획 구체화 • 치안계획 경찰과 협조 • 인력동원, 민방위활동, 화생방보호활동 • 전시 재난 및 안전관리, 전재민 수용·구호 등

※ 행정안전부 2018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실무지침서(pp-27)

6. 총무계획의 3대 기능과 내용

가. 총무 3대 기능

① 정부기능 유지

1. 전시행정체제로 전환 : 행정기관 신설·축소, 행정권한 위임·위탁, 정부기관 소산·이동
2. 국가전쟁수행체제 강화 : 전쟁단계별 외교활동, 국민 홍보활동 강화,
주요물자 수급 및 수출입 통제 등
3. 부처별 소관 기능에 따라 전시업무 수행 : 전시 재정회계 및 경제운용,
국가기반시설 보호/긴급복구, 사회질서 유지/재난안전관리 등

② 군사작전 지원

1. 군사작전지원을 위한 자원동원 : 인력, 물적 자원
* 국가동원, 전시인력동원, 산업동원 등
2. 주민 및 차량통제 : 군 작전이동로 확보, 주민보호/ 작전공간 확보(주민소산)
* 접적지역 : 경기·강원·인천시 등 13개 시·군·구
* 수도권 : 서울시 중심 30km이내 16개 시

③ 국민생활 안정

1. 전상자 치료 : 중·경상자 입원 및 통원치료
2. 전재민 구호 : 지역피해민 일반구호, 전방지역 주민철수/이동통제, 철수주민 수용, 구호
3. 생필품 안정적 공급 : 생필품 유통통제 및 배급제 실시
4. 단전·단수 대비, 전력·수도·가스 등 공급대책 : 비상급수시설·장비, 자가 발전기 확보 등

【전시 창설기구】 참고 #1

구 분	설치 시기	주관부처
① 전시 정부기관 이동통제본부	총무 3종 사태 시	행정안전부
② 전시 주민 이동통제본부	총무 2종 사태 시	행정안전부
③ 전시 민방위재난통제본부		행정안전부
④ 합동수송통제본부		국토교통부
⑤ 전시홍보본부		문화체육관광부
⑥ 전시자유화통합본부	반격작전여건 조성 시	통일부

나. 총무계획 번호체계 및 주요내용

계획번호	구 분	주 요 내 용
2100	방송통신위원회	전시 방송매체 운영 및 방송기능 유지
2200	법제처	전시법령 정비 및 공포, 전시법령 입안 및 심사
2300	국가보훈처	전시 보훈관리, 보상금 지급, 국립묘지 관리
2400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시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 동원
2500	공정거래위원회	전시 공정거래 정책, 시장 감시, 소비자 주권 확립
2600	금융위원회	전시 금융정책 총괄 및 운영
2700	국민권익위원회	전시 고충처리, 공공기관 부패방지, 행정심판위 운영
2800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시 방사능 방재, 핵연료 및 원자력발전소 안전조치
3100	기획재정부	전시 경제정책 및 재정운용, 물자조달, 공공기관 관리
3200	정보통신과학부	전시 연구개발, 과학기술인력 보호,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3300	교육부	전시 교육, 학교운영, 학생보호
3400	외교부	전시 외교활동, 재외국민 계도, 주한 외국공관 보호
3500	통일부	전시 북한 체류 국민 보호 및 철수, 피난민 수용 및 관리
3600	법무부	전시 법무 및 검찰운영, 인권행정, 교정관리, 출입국관리
3700	국방부	전시 병력동원 * 작전수행
3800	행정안전부	전시 정부기관 소산, 주민 및 차량통제, 인력동원
3900	문화체육관광부	전시홍보 총괄, 문화재 관리
4100	농림축산식품부	전시 양곡 및 부식 안정공급, 농·축산 보호
4200	산업통상자원부	공산품 동원 및 수급, 에너지 공급(가스, 석유, 전력)
4300	보건복지부	전시 의료지원, 혈액수급
4400	환경부	먹는 샘물, 대기·수질관리, 폐기물 처리, 기상자료 지원
4500	고용노동부	전시 노사관계 유지, 근로기준 조정
4600	여성가족부	전시 여성의 자립 지원, 여성보호, 피해구제
4700	국토교통부	자동차·건설기계, 건물·토지동원, 수송통제, 긴급복구
4800	해양수산부	전시 선박동원, 항만시설 긴급복구

7. 총무사태별 조치사항

가. 총무사태 발령 : 국방장관 건의-(안전보장회의 심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선포

* 사태 전파 :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하여 전국에 동시전파

나. 사태별 조치사항

구 분	상 황	조치 사항(154건)
총무 3종 사태	적의 도발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상태로서 평시보다 높은 전쟁준비태세를 갖추는 상태	증가된 준비태세(계획 시행준비), 76건 - 전시 행정체제 전환 - 공무원 비상소집 - 정부종합상황실 운영 - <u>국가 동원령 선포(부분동원)</u> - 전시대기법률(안) 제출 - 북한 잔류자 귀국조치(개성공단) - 국가지도통신망 점검 - 접적지역 어선 조업통제 및 귀향조치 등
총무 2종 사태	적의 전쟁도발 위협이 가일층 증대하여 긴장이 고조된 상태로서 최고의 전쟁준비태세 보다는 낮으나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단계	더욱 강화된 준비태세(계획 부분시행), 66건 -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 <u>국가동원령 선포(총동원)</u> - 전시대기법령(안) 공포 - 정부기관 소산이동 - 접적지역 주민이동 - 전쟁수행기구 창설 등
총무 1종 사태	전쟁이 임박한 최상의 위기상태로 최고의 전쟁준비를 완료하는 단계	고도의 준비태세(계획시행), 12건 - <u>계엄령 선포</u> - 전시 외교/통상 계획 시행 - 수도권 주민 및 차량통제 - 전시행정조직 운영 - 북한 피난민 수용소 운영 - 자유화 통합계획 시행준비 등

※ 을지사태 : 을지태극연습 간 적용하는 총무사태

다. 총무계획 수립절차

1) 세부계획 수립절차

1. 소관분야 계획(안) 작성 및 내부 결재	→	• 계획(안) 작성, 내부 결재 • 관련기관 배부
2. 계획총괄부서의 조정통제	→	• 분야별 계획담당부서는 비상대비계획 총괄부서에 통제 요청(반영사항, 연계성 등) • 계획 총괄부서는 계획에 대한 총무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판단
3. 총무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	• 계획의 연계성, 보완 반영사항 등 확인 • 계획 총괄부서에서 분야별 계획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거나 각 계획별로 추진 ※ 총무계획심의위원장 : 부기관장
4. 기관장 결재	→	• 도지사, 시장, 군수(업체 비밀생산 관련의 장)
5. 비밀문서 담당부서 심의 및 통제	→	• 비밀생산 관련 협조 및 통제 • 원본, 시행문 문서번호 부여 등
6. 상급기관에 승인 요청	→	• 시, 도 → 소관분야 계획 부처 • 시, 군, 구 → 소관계획 관련 시, 도에 요청 • 상급기관 승인 과정에서 계획의 적절성 검토
7. 승인 후 시행문 결재	→	• 비밀발간 신청, 지출승인서 등 작성
8. 책자 발간 및 배부	→	• 관련 부처, 관련부서, 시·도, 시·군·구, 동원 업체, 군부대 등 유관기관 배부

2) 자체 총무계획 작성실무(핵심)

- 작성기관 : 중앙·지방행정기관, 중점관리업체, 공공기관, 정부공사
- 방침 : 전시직제 / 제기능 임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망라하여 작성
 - ※ 실시계획 작성기관은 분야별 통합하여 작성 가능
- 작성요령 : 전시 임무를 총 망라하여 각종 총무계획과 연계 하 작성
- 계획 확정 : 당해 기관의 장(매년 12월 말)
- 포함사항
 - 해당기관 및 업체의 전시 임무, 직제 및 정원표
 - 총무사태별 세부 조치사항
 - 전시 소산 및 우발사태 대비계획, 민방위대 운영계획
 - 비상소집 및 근무계획, 비밀지출 및 파기계획
 - 전시 상황실 설치 운영계획, 통신운영계획
 - 기타 비상대비와 관련되는 사항(부서단위 전시 임무카드)

8. 총무계획 작성 현실태 및 발전방향

가. 공무원 및 기관장의 총무계획에 대한 관심도

1) 현실태(문제점)

- 비상대비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된 6급 이하 공무원이 작성
- 담당공무원의 잦은(6-12개월) 교체, 기피업무로 인식하는 경향
- 전시대비계획은 국가사무로 인식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소홀
- 문서전결 규정에 의거 총무계획을 기관장의 결재를 받지 않는 경우

2) 발전방향

- 전문성을 겸비한 비상대비업무 전담자의 임명 활용
- 승진가점 등 동기부여로 비상대비업무에 매진 여건 보장
- 총무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기관장결재를 득한 후 상급기관 승인 요청
- 전결규정을 수정하여 총무계획 기관장 결재로 관심 유도
- 비상대비 관계자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로 업무능력 향상

나. 총무계획 작성순기 준수

1) 현실태(문제점)

- 일부 총무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은 작성 순기를 경과하여 작성하는 사례

2) 발전방향

- 총무계획 작성순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X-1년 12월에 동원대상자, 중점관리지정업체에 임무고지를 하고
- X년 1월에 동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야 함.

다. 총무계획 작성의 중점을 인식

1) 현실태(문제점)

- 대부분의 계획이 상위계획을 복사하여 당해 기관의 구체화가 미흡
- 정부기능 유지 및 국민생활 안정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

2) 발전방향

- 소관분야 상위 총무계획의 목표나 방침을 보다 구체화하여 해당기관이 특성에 맞게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술
- 총무계획의 3대 기능 중심으로 작성해야 함

라. 총무계획 작성기관 간 연계성유지 및 유관기관 협조

1) 현실태(문제점)

- 총무계획 작성기관 · 유관기관간의 횡적 연계성 미흡
- 가정에서 제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계획에 연계성이 미흡
- 총무계획 작성 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있어서 차이점 발생
 - * 비상대비 환경 미포함, 누락, 가정 적용의 상이 등

2) 발전방향

- 담당기관의 고위공무원 주관 하 총무계획 작성 협조회의 실시 및 총무계획 작성 통제로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

마. 비상대비환경 분석의 중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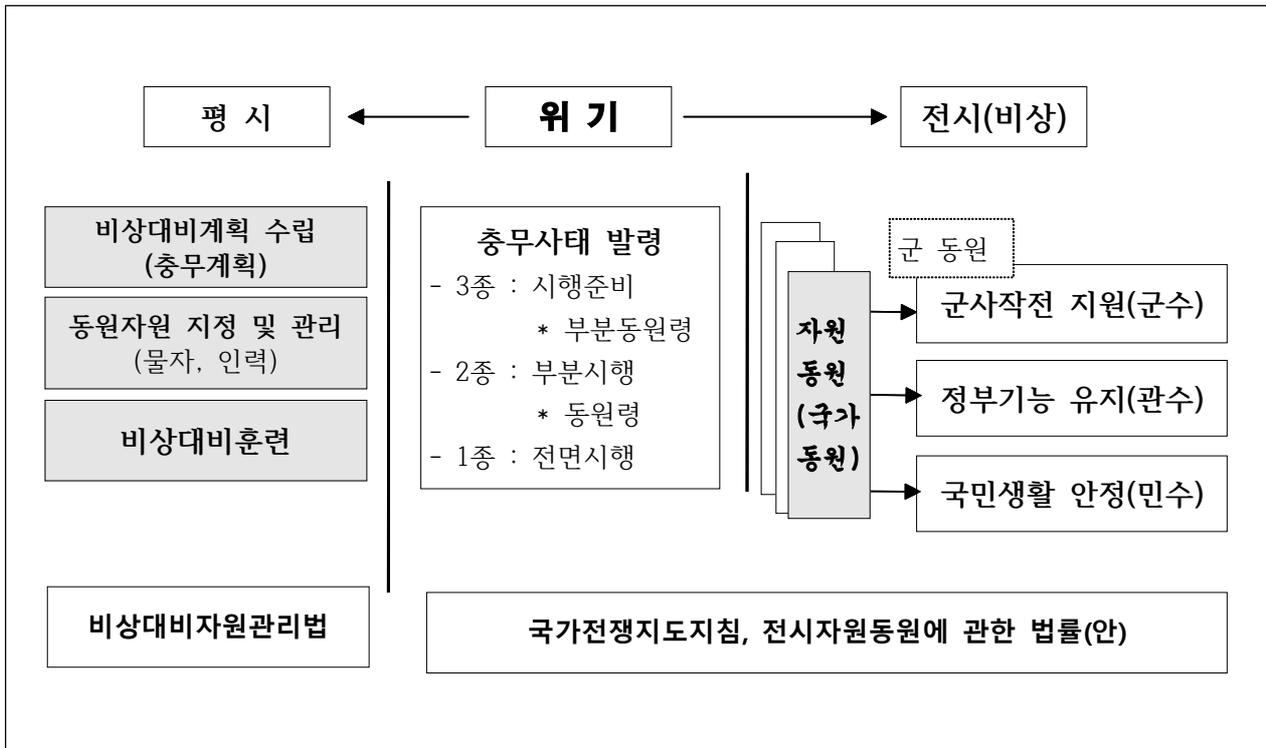
1) 현실태(문제점)

- 비상대비 환경분석을 처음부터 생략 또는 상위문서를 그대로 복사 활용
- 집행계획과 실시계획의 비상대비환경이 모두 유사한 실정
 - * 과학기술의 발전, 산업발전 등 환경요소를 미반영

2) 발전방향

- 시행계획은 해당 시·도의 소관업무를 고려, 가정을 세분화·구체화
- 시·도의 특징적인 업무와 소관업무의 연관성, 지역특성을 포함하여 기술

9. 비상대비(총무)계획 업무수행(과정)



* 비상대비계획(총무계획) : 군사작전 지원 + 정부기능 유지 + 국민생활안정계획

10. 국가비상대비 현실태 및 개선방향 (참고:비상대비연구논총 2018년 44호)

가. 비상대비조직

한국의 위기관리체계는 군사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 안보 관리위주 조직 전시와 이에 준하는 상황에 대한 비상대비, 대테러, 자연재난, 사회적재난 관리 전시와 평시위기에 관한 민방위로 구분하여 대별되지만 세분화영역 미구축

나. 국가비상대비 관련 법규

국가안보 목표와 국가위기관리 법률을 연계성 있게 규제할 포괄적 차원의 국가위기관리 법령이 없음(비상대비자원관리법, 민방위기본법)

※ 위 2가지 법률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제정배경, 목적, 상이하여 충돌, 차이 발생

다. 동원물자관리 및 수송분야

동원지정, 자원할당, 배분에서 동원자동화 정보체계가 미흡하여 소요제기 단계부터 전산화화 구축이 미흡하고 상호 체계적인 연동이 제한되어 실시간 운용제한

※ 부처별 운용되는 동원전산시스템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 시스템 연계미구축, 상호 연동불가

라. 비상대비 교육훈련 분야

정부통제 훈련에서 객관적인 평가와 교육훈련 환류시스템 운용이 제한됨 과학적 분석모델과 상호 기술적 시스템적용이 제한되고, 사회환경 변화와 미래 다양한 전장환경 변화요소에 실시간 적용이 미흡하고 특히 사이버 영역과 네트워크 연결 등 미래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능력이 부족

마. 국가비상대비 체계의 첨단 ICT적용 발전방향

- 1) 상시운용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국가비상대비 플랫폼 구축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국가위기관리센터-중앙재난안전상황실-지자체-현장)
- 2) 인공지능(AI)에 의한 의사결정지원 체계 구축
- 3) 사물인터넷(IOT)에 의한 동원자원과 주요시설 관리 강화
- 4) 드론봇 활용한 동원물자 및 장비 수송
- 5) 가상 및 증강현실 기반의 비상대비 훈련

※ 참고 : 중점관리업체 실시계획 작성(통신업체 예)

가. 목 적

- 실시계획의 작성 목적을 기술

나. 가 정

- 상급계획 범위내에서 실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만을 기술

다. 목표 및 방침

- 업체의 전시 임무수행 달성을 위한 방침을 간략하게 기술

라. 비상시 방송운용계획

- 총무사태별 방송운용계획 및 보도통제사항 등 작성

마. 전시 통신지원 및 운영

- 편성 및 운영지침
- 전시통신지원 및 운영

바. 필수 방송시설 및 복구계획

- 필수 통신시설, 긴급복구계획, 시설 거부계획 등

사. 동원 및 배분

- 소요기관별 임무고지 배분현황 등을 자원 소요처별로 작성

아. 비상대비 평시사업계획

- 비축물자 관리, 교육 및 훈련 등 평시 조치사항을 기술

자. 행정 및 협조사항

- 실시계획 작성 및 협조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기술

1

※ 총무계획 작성은 중점관리업체,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작성형태는 동일

제 6 교시

(16:30~17:20)

- # 1. 전주 모의고사 평가 및 풀이 설명
- # 2. 금주 모의고사 실습 및 작성방법 지도

#1. 전주 모의고사 평가 및 풀이 설명

문제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의와 군 및 국가의 대비방향

총평 : 최우수(A++) 94점

1. 서론

우리는 2006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합의한 후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 핵심군사능력인 기본운용능력(IOC)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SLBM)의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의 건조 추진과 최근에는 1년여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확고한 대비태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 우리 군 및 국가의 대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서론 양호)

1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의와 찬성 및 반대 입장

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의 (기술내용 양호)

전작권전환은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기존의 미군 주도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미래 연합사령부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것이다.

첫째, 전작권전환은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로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영토와 민주주의를 수호 하겠다는 결과를 나타내며, 전작권 전환을 통해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이다.

둘째, 전작권행사는 **국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군사력 운용의 자율권을 회복하는 의미와 함께 전·평시 통일전략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다.

셋째, 한국군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자존감 향상**과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이외에도 외교적 자율권 행사로 국제적 영향력 증대와 **국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나. 전시작전통제권의 찬성 및 반대 입장

전작권전환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자체적인 전쟁계획 수립, 자주 국방능력 향상 등의 의의가 있지만 아직 시기상조이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견도 있다.

1. 전작권전환 찬성입장

첫째, 주권차원의 안보자주권 확립과 미군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국방자위권** 확립이다.

둘째, 자주적 전시작전 수행으로 대북 협상력 제고 및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자** 역할이 가

능하다

셋째, 한국군 주도의 **군사력 증강**이 가능하고 대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무기체계 및 군사력 증강에서 미국의 의존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주국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미국 역시 외교적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항구적으로 보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기술내용 양호**)

2. 전작권전환 반대입장

첫째, 전작권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조건**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보수집 능력으로 최근 **글로벌호크**를 도입하였지만 정찰위성 등 정보자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둘째, **한미동맹의 약화**와 준비증가의 우려이다. 기존체계보다 연합작전 수행능력이 제한되고 한미동맹으로 확보한 이점을 스스로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많은 준비증강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해결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전작권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의 전쟁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다는 점과 한미간 군사력 연계성 제한 등 우려의 견해는 있지만 **한국의 국익을 위해 어떻게 추진되면 좋은지 심사숙고하여 진행해야겠다. 견해도 있다.** (**간략하게 입장만 제시**)

III.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 우리 군과 국가정부의 대비방향

자주국방을 이루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이 현 세계질서의 원칙인 것이다. 전작권전환을 위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군과 국가의 대비가 필요하다. (**개념기술 우수**)

가. 우리 군의 대비방향

첫째,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편성과 지휘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동안 한미 연합연습으로 미국에 많은 것을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주도의 계획 수립, 연습이 가능한 체계 구비와 지속적인 작전수행 능력 숙달이 필요하다.

둘째, 정찰자산 증가 등 **정보획득 수단**이 보강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제한된 정보자산에서 정찰위성, 고고도무인기 등 군사력 강화로 다양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전구작전의 주도가 가능한 전쟁수행체계와 **한미간 군사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미간 원활한 협조와 협의로 상호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연합연습체계 및 작전계획 검증과 각종 **지침 및 지시 등의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나. 국가차원의 대비방향

첫째, 전작권 전환에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립안보의식**이다. 우리 국민이 영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침략에 대비하여 결사항전과 변영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결연한 안보의식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차원의 **총체적 안보역량 강화**이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회의 기능 강화 및 국가급 차원에서 전쟁지도체제를 확립하며, 예비전력 관리 및 전시 동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자국 국방 및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국방개혁과 국방비를 증액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여건을 충분히 구축해야 한다.

셋째, 동맹외교를 통한 **전략적 소통**이다. 전작권전환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전쟁수행 능력인식과 제고를 위한 협상전략과 지침, 방향 등의 기본방침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정부, 국방 및 군사당국, 민간 차원 등 각 분야에서 총체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전작권전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며, 정부의 **총무계획**을 보완하는 등의 전쟁지속 능력 보강의 노력이 필요하다.

IV. 결 론 (우수)

이상과 같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의와 우리 군 및 국가의 대비방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전작권 전환은 국가안보의 기본 틀이 바뀌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및 주변국정세, 특히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전환은 시기 상조일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민족은 위기를 잘 극복해 왔고 **~(자주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전작권 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국민, 정부, 군이 3위 일체가 되어 추진할 때 가능할 것이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한 가운데 우리의 국익을 위한 전작권전환이 추진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위기를 호기로 전환하여 극복한 국가발전의 사례가 많았다.)

논술시험 1차

2021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시를 대비한 완벽한 군사대비태세가 고도로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 비축제도는 이러한 대비책 중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여 우리정부의 효율적인 자원비축 관리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총 15점)

1) 우리나라 비축제도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5점)

2) 우리나라 현 비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기술하십시오. (10점)

논술시험 2차

2021년 상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제 2 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이라고 밝히고 북미협상 결렬과 지속적인 UN제재 압박시 이에 상응한 응징과 무력도발을 멈추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충무계획의 실효성은 완벽히 검증 되어야 하며,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비상대비업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15점)

- 1) 현 우리나라 충무계획(비상대비계획)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라.(5점)
- 2) 4차 산업혁명시대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비상대비체계 발전방향에 대해서 기술하라.(10점)

정답 및 해설

문제1 논술핵심(요약)

<p>I. 서론</p> <p>1. 문제 상황요약, 최근북한위협 / 경향</p> <p>2. 우리정부의 대응, 논술전개 순서 등</p> <p>II. 본론</p> <p>1. 비축의 개념과 중요성</p> <p>2. 현재 우리나라 비축관리제도의 문제점</p> <p>3. 비축제도의 발전방향</p> <p>III. 결 언 ◦ 앞의 내용 논고요약 / 자신의 주장언급 / 발전방향 제시 등</p>
--

I. 서론

1. 문제 상황요약, 최근북한위협 / 경향
2. 우리정부의 대응, 논술전개 순서 등

II. 본론 기술(예)

1. 비축의 개념과 중요성

가. 비축개념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필수적인 긴요물자와 중요시설의 긴급복구자재 등을 평시에 구입하여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

비축물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 및 주요 업체장에게 평시 지정명령 하여 확보하도록 하는 물자로서 전시 동원물자나 군수물자와 구별되며 주로 정부 기능유지나 국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물자이다.

나. 비축의 중요성

- 1) 전쟁초기 즉각적인 군사작전 지원과 정부기능 유지에 기여
- 2) 비상시 긴급복구물자 확보로 국가기반시설 정상화에 기여
- 3)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물자의 적시보급으로 국민생활 안정화에 기여

2. 우리나라 비축제도의 문제점

가. 각급 기관별 비축물자 관리계획 미수립

나. 비상시 목표, 인구 및 시설 규모 대비 비축량 부족

다. 비축예산 미확보, 물자의 노후화, 구형비축 물자확보에 대한 주기적 순환미흡

라. 비축물자 보관시설 부실(노후화, 야외 보관 등)

마. 형식적인 현장점검 실시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 미숙(법령, 지침 미숙지)

3. 비축제도의 발전방향

가. 비축물자 보관관리 측면

- 관리책임자 임명, 품질/성능저하방지, 변질예방, 일반물자와 분리 보관
- 비축물자 순환 비축 및 주기적인 대체 사용

나. 비축물자 보관 및 저장시설 관리 측면

- 사용예정지에서 가까운 곳, 시설방호 및 안전관리에 용이한 장소 선정
- 수송이 편리하고 작업조건이 좋은 곳 선정
- 온도, 습도, 통풍, 내화 등 당해 물자 보관에 최적의 구조에 보관

다. 비축물자 운용관리 측면

- 비축물자 운용관리 개선계획 수립 시행 : 매년
- 비축물자 증장기 예산 확보 : 유지보수, 순환대체 비용, 신규 구입비 등
 - * 노후화, 성능저하 방지, 비축저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비축물자품목, 수량 등 매년적정성판단, 주무부처협의, 총무계획에 반영
- 비축물자 사용/해제/신규 승인 절차 준수
 - * 비축기관 → 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승인
- 주무부처·청/시·도의 산하기관 및 업체 관리 철저
 - * 비축계획 수립, 운용, 관리에 대한 승인, 조정, 통제, 감독 실시
 - * 관리기준과 의무 미이행시 관계법규에 따라조치, 원상회복 조치

III. 결 론 : 생략 (최소 4줄 정도 기록)

1. 앞의 내용기술, 비축제도의 문제점 개선사항, 발전방향, 기대효과 등 제시
2. 다양한 위협에 효율적 적응가능, 대규모 재난사태 발생시에도 효과적
3. 고사성어, 결언 등 자신의 주장 등 제시

문제2 논술핵심(요약)

I. 서론

1. 문제 상황요약, 최근북한위협 / 경향
2. 우리정부의 대응, 논술전개 순서 등

II. 본론

1. 우리나라 총무계획의 문제점 분석과 발전방향
2. 4차 산업혁명시대 ICT를 적용한 비상대비 발전방향

III. 결론 - 앞의 내용 논고요약 / 자신의 주장언급 / 발전방향 제시 등

I. 서론

1. 최근 이슈 / 문제제기 / 해결방향 / 논술 전개 순서

II. 우리나라 총무계획의 문제점 분석과 발전방향

1. 총무계획의 문제점 분석

비상대비란 무엇인가? 현재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동원업무” 그리고 국가전시지도지침에는 “국가가 전시·사변·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사태”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상대비개념은 법령별로 미미한 차이점이 있고 전쟁에 국한되는 협소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시(戰時)위주 비상대비개념은 오늘날 전쟁, 테러, 재난, 전염병 등 모든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포괄(comprehensive)안보개념과 부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1) 법령분야 문제점

법령별로 국가위기 개념이 상이하고 포괄 안보개념에도 부합하지 않다. 예컨대 비상대비자원관리법¹⁾과 국가전시지도지침²⁾ 등에는 비상대비를 “전시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국가위기관리지침은 “‘국가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첫째, 전시법과 평시법이 연계되지 않고 체계 또한 모호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통합방위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은 자원동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동원규정은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계엄법 등과 전시관계법령’에 ‘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안)’ 또는 ‘대통령 긴급명령(안)’에 명시되어 상호 연계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원집행시기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조직의 분산과 기능중복 초래이다. 비상대비조직이 갖추어야 할 속성은 통합성, 유기성, 협력성, 학습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적용해 보면 어느 것 하나 충족되는 것이 없다. 예컨대 조직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대책기구도 민방위협의회,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

책본부, 통합방위협의회 등으로 기능이 유사 중복된 기구의 난립으로 비상사태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분산된 비상대비훈련체제 고착화로 효율성이 저조한 관례적인 훈련실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훈련내용, 방법, 기간, 참가대상 등이 상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도 높은 훈련으로 비상사태대응능력 배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개별법에 따른 자원의 분산관리로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각종 자원의 통합·조정으로 복구가 구조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이다. 또한 비상대응에 동원이 아닌 자발적 참여자와 물자·장비 등의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2) 비상대비 조직분야 문제점

우리나라의 비상대비조직은 그간 위기발생 이전에 사전대응(proactive)하는 개념보다는 발생 이후 사후대응(posst active)하는 개념에 따라 조직을 상황논리에 따라 신설·보강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점은 먼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조직의 비정형화(非定型化)이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며, 기관별로 그 명칭과 운영 그리고 업무수행 내용도 제 각각 이어서 평소 상하·수평적 업무연계와 협조는 물론 비상사태발생시 일사불란한 대응조치가 제한되는 구조여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처 및 시도의 종합상황실 기능의 미약이다. 상황실은 인체의 심장과 같이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핵심기능이지만 현재 중앙부처와 시도의 상황실의 편성과 운영은 기관별로 제각각이다. 그 결과 기관별 수직·수평적 상황전파와 보고체계가 복잡하여 부·처 및 시·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종합상황실의 정보수집, 종합분석, 상황전파 및 보고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각종 비상설 회의체와 대책기구의 분산·중복으로 비상사태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현재 개별법에 따라 상황별로 민방위협의회,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방위협의회 등을 중앙정부-시·도-시·군·구 단위로 각각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3) 분산·중복된 연습훈련 문제점

현재 비상대비훈련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도출해 볼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전·평시 훈련의 분산 실시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즉 개별법에 따라 상이한 훈련기준과 일정 그리고 방법과 내용을 전국적 혹은 지역단위로 연중 불규칙하게 실시하고 있어 통합성과 효율성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체계적인 훈련관리가 미흡하여 훈련성과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셋째, 기관장 등 의사결정권자들의 무관심과 참여 부족, 훈련결과 및 사후처리계획 등의 연습감 내지 대통령에 미보고 등이 어우러져 비상대비훈련은 그저 해마다 실시하는 연례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4) 분산된 자원관리의 문제점

자원관리란 국가비상시 활용할 인력자원과 물적 자원의 현황을 수집·관리하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자원조사, 물자비축 등을 통해 자원을 즉각 활용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행위이다. 평소 비상대비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유사시 즉각 대응 및 복구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개별법에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다.

첫째, 물자비축이다. 물자비축은 비상사태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필수긴요 물자와 중요시설의 긴급복구자재 등을 평시에 구입, 저장, 관리하는 것을 지칭하며, 그 종류는 정부비축, 업체비축, 개인(가정)비축이 있다. 비축물자 대상은 주로 식량·식료품류, 전기·연료, 의약품·기기, 차량, 정보통신용품,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있다.

둘째, 동원소요심의 기능 미약으로 충무계획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가 제기하는 동원소요는 자체심의를 하지 않고 일선 군부대에서 제기한 것을 단순히 종합하는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자원주무부처도 소관자원의 현황과 동원능력을 바탕으로 국방부에서 제기한 동원소요의 검증과 심의도 강도높게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자원조사 방법의 문제이다. 자원조사는 비상사태시에 소요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평시에 자원상태를 조사하는 매우 중요한 행정행위로 현지방문조사와 서면조사로 구분된다.

5) 비상대비 전문인력 양성의 문제점

첫째, 장기간의 교육과 경험에서 습득되는 전문기술(Expertise), 둘째,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Responsibility)을 다하고, 셋째,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통일체 의식과 아마추어와 다른 집단으로 자각하여 형성되는 단체성(Corporateness)을 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비상대비 분야는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공무원 인사제도의 문제이다. 비상대비분야는 공무원 사회에서 소위 3D로 인식하여 부서보직을 기피하고, 1-2년 단위 순환근무인사제도로 인하여 담당자들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둘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비상대비교육과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현재 비상대비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등에서 신규 임용 내지 승진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비상대비담당업무에 보직된 공무원과 비상계획관을 대상으로 신규임용자, 실무자, 중급관리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비상대비정책 및 홍보의 전문성 제고노력이 미약하다.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된 정책수립과 홍보를 서는 국내외 정세와 기후변화, 남북관계 등에 대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쌓아야 한다.

2. 우리나라 충무계획의 발전방안

1) 효율적인 법령의 재정비

먼저, 전시대비에 한정된 비상대비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여야 한다. 현재 전시로 한정된 개념은 전쟁, 재난, 자연재해, 전염병 등 다양한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오늘날 포괄적 안보환경에 부합되지 않기에 그 범위(scope)와 수준(level)을 규정하여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둘째, 통합적 국가비상대비체계구축을 위해 신법으로 가칭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현재 기능별로 각각 수립되는 계획도 하나로 통합 작성하여 국가위기관리전략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비상대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즉 현행 법령상 유사 중복되는 조항을 조정·통합하여, 계획수립, 대책기구운영, 연습훈련, 확인평가, 협의체 운용, 지휘통신망 및 상황실 운용, 자원통합관리 등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지자체 비상대비업무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국가사무처리 제한³⁾규정으로 인해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것 이외 부수

적인 업무는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비상대비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실상부한 지역통합방위본부장으로서 군, 경, 소방, 민방위대 등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위기대응 및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을 보완해야 한다**

2) 중앙정부 및 지자체 조직 재정비

먼저, 비상대비, 민방위, 재난분야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이다. 비상대비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기구가 업무총괄, 중장기 기획서 작성, 계획수립, 자원관리, 연습훈련실시 등에 관해 부·처 및 지자체의 업무조정 및 통제, 협조·지원하는 체제이다.

둘째, 차선책으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편성하는 방안이다. 국가비상대비업무를 조정통제하는 총사령탑(control tower) 기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된 재난업무도 1개 기관으로 일원화시켜 업무 중복과 혼선 그리고 추가 행정소요를 줄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의 집행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비상대비 계획수립과 법령·제도 등 기획기능에 전념하고, 지자체는 현장대응위주의 집행 및 실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조직편성과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넷째, 지자체별로 각양각색으로 비정형(非定型)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 비상대비조직을 중앙정부와 연계시켜 정형화하여야 한다.

그외에도 지난해 통합운영하기 시작한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법적 뒷받침을 통해 인력과 조직을 보장시켜 주어야 한다.

3) 각종연습훈련 통합 실시

“국가비상대비종합훈련”으로 발전시켜 이른바 실리우드 효과(silliwood effect)⁴⁾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통합방안은 명시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각 기관별 입장과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완성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첫째, 전·평시가 연계되도록 훈련을 통합하여야 한다. 훈련은 매년 1회 1주일간 실제훈련위주로 공무원 중심이 아닌 국민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훈련내용(contents)도 평소 재난·핵심기반체계, 전쟁억지 및 전시전환절차, 각종 계획 교육 등을, 전시 자원동원훈련은 실제 주야간에 실시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둘째, 비상대비훈련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훈련수준과 성과를 격상시켜야 한다. 훈련관리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임무분석- 훈련준비- 훈련계획수립-통제 및 평가-강평 및 사후처리 단계마다 조치할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단계별로 상호 연계되고 훈련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즉 환류체계(feedback system)가 작동되어야 한다.

4) 전·평시 자원통합관리체계 구축

전·평시 자원 통합관리와 운영은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고도 조직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대응 및 복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첫째, 체계적인 자원관리와 동원을 위해 가칭 “자원관리종합상황실”을 운영해야 한다. 각종 자원비축(備蓄)은 형태(type), 종류(kind), 그리고 현재 상태까지도 범주화(categorizing)시켜 데이터베이스(Data Base)화하여, 체계적인 자원현황관리(Tracking)를 해야 한다.

둘째,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상호 협약 등을 맺어 자원동원을 적기 적소(適期適所)에 투사(projection)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난발생시 실제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과 수량을 확대해야 한다.

현행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 비축물자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와 재난사태선 포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난사태에 활용할 수 있는 비축물자가 얼마나 되는가? 라고 자문해 보면 쓸 수 있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5) 전문인력 양성

첫째, 각급기관별로 분산하여 실시하는 민방위, 비상대비, 재난, 소방 등의 교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가칭 “국가비상안전교육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평시 비상대비관련 교육을 정부산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대학, 관련단체·협회 등과 협의하여 비상대비전문교육과정 개설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셋째,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개선·보완해야 한다. 대부분 공무원들도 비상대비분야에 전문인력 운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순환보직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비상대비정책 및 홍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비상대비업무는 타분야와 비경합성이고 비밀로 분류되어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내부조차도 접근성이 높지 않고, 타 업무와 비교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그외에도 현재 중앙부처 및 중점관리업체에 보임된 비상계획관의 임기보장과 보임을 확대해야 하고, 지자체도 비상대비분야에 대해 기관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상임 개념의 안보자문관보다는 비상계획관을 보임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

Ⅲ. 4차 산업혁명시대 ICT를 적용한 비상대비 발전방향

1) 상시운용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국가비상대비 플랫폼 구축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국가위기관리센터-중앙재난안전상황실-지자체-현장)

2) 인공지능(AI)에 의한 의사결정지원 체계 구축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설치로 다양한 상황변화에 적시적대응 조치

3) 사물인터넷(IOT)에 의한 동원자원과 주요시설 관리 강화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위치기반시스템(하수도범람,무선전자태그,대테러감시시스템 등)

4) 드론을 활용한 동원물자 및 장비 수송

-전공간 및 시공간을 초월한 드론활용으로 적시적 수송체계 구축

(아마존 프라임, CJ스카이도어, DHL의 파슬콧터, 알리바바 쿼드라콧터 등)

5) 가상 및 증강현실 기반의 비상대비 훈련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적용한 실전적 훈련과 체험

(문화재청 복구훈련, 대피소 찾기, 국민행동요령 등 가상체험 적용 등)

IV. 결 론

1. 첨단화된 현대사회에서도 평시부터 비상대비 체계구축 필요성 증가
2.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조치와 방안적용시 첨단기법 활용체계 구축
3. 동원자원과 국가주요시설 관리에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 접목 발전
4. 수송 및 물자운송시 드론봇 활용하는 첨단시스템 구축
5. 가상 및 증강현실 기반의 훈련체계구축과 유사환경조성 숙달

소결론: 4차 산업혁명시대 포괄위협 대비 비상대비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적용

우리나라는 여전히 어려운 안보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의 위장된 평화와 거짓 통일 환상에 빠져 국가 비상대비 업무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라는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이들에게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